

북한 제7기 제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분석

Online Series

2020. 5. 28. | CO 20-07

홍민 (북한연구실장)

북한이 제7기 제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지속’을 재차 확인했다. 새로운 부대 조직편성도 강조했다. ‘핵전쟁억제력’, ‘전략무력’, ‘위험적인 외부세력들’ 등의 표현을 통해 대미·대남 압박의 의미도 담았다. 한편 군사부문에서 나타난 군사정치활동의 편향, 불합리한 기구·편제 바로잡기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군 내 당위원회 활동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결함을 의도적으로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무력 구성에서 불합리한 기구 및 편제 결함 역시 군사조직, 준군사조직, 안전기관 등 사이의 지휘와 균형의 문제도 다뤘다.

이번 회의에는 2018년 이후 참석하지 않던 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이 참석하고 군중·군단급 정치위원이 포함됐다. 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는 곧 ‘총정치국’을 일컫는다. ‘정치위원’은 각 군중·군단급에 파견된 당의 대표다. 이번 회의가 군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 군 내 당위원회 활동이 중요한 의제였다는 것을 뜻한다. 2019년 12월 20일 제7기 제3차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략무기 개발파’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승진 인사를 통해 군의 사기는 높여주면서 한편으로 조직정비와 군사정치활동 결함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기강은 다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미협상 재개의 여지를 둔 ‘관망’ 속에서 대미협상파의 잠정적 일선 후퇴, 전략무기 개발파의 입지 강화, 군부의 기강 다잡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성된 상황을 고려, 북한의 전략무기 등장 카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유력한 가능성은 (탄도 및 순항) 단거리급 무기의 추가 개발 공개, 대공미사일 체계 공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 과정 공개 등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5월 24일 김정은 당 위원장 겸 중앙군사위원장이 주재한 제7기 제4차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를 보도했다. 기존 관행대로 회의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에선 세 가지 안건이 토의됐다. 첫째, 군사부문의 군사정치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의 분석·개선방도 마련, 둘째, 군사부문 기구 및 편제상의 결함들 검토·조정, 셋째,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새로운 부대들의 조직편성을 통한 군사적 억제능력 완비다. 김 위원장은 토의·결정된 7개의 명령서에 친필서명을 했다. 명령서들은 ‘새로운 군사적 대책들’, 중요 군사교육기관의 기구개편, 안전기관의 군사지휘체계 개편, 계급 승진 등에 관한 것이다.

대미협상과 전략무기 개발 사이의 전략적 균형과 긴장

이번 회의는 표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의 중단 없는 지속’을 재차 확인한 점이다. 새로운 무기체계에 맞는 새로운 부대의 조직편성도 강조했다. ‘핵전쟁억제력’, ‘전략무력’, ‘위협적인 외부세력들’ 등의 표현을 통해 일정하게 대미·대남 메시지 용도도 드러냈다. 다른 하나는 군사부문에서 나타난 군사정치활동의 편향, 불합리한 기구·편제 바로잡기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군사부문 내 당위원회 활동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결함을 의도적으로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무력 구성에서 불합리한 기구 및 편제 결함 역시 군사조직, 안전기관, 준군사조직 등 ‘무력’ 사이에 지휘와 균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면적인 메시지 밑으로 흐르는 기류의 감지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대미협상과 비핵화를 두고 주요 권력기관 및 엘리트 사이에 일정하게 입지에 대한 긴장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 또는 그것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 있다. 소위 대미협상과 전략무기 개발과 및 군부 사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직 한쪽으로 무게 추를 확실하게 옮기지 않고 일단 적절한 균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성되는 대내외 정세를 가늠해 가며 전략적 결정의 추를 한쪽으로 확실하게 옮길 가능성은 있다.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와 ‘전략무기 개발 지속’이라는 기조 속에서 ‘대미협상국 신설’을 공개한 점은 미국 대선이 끝나는 2020년 연말까지의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무게 추의 일정한 균형은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것은 세력 경쟁보다는 관련 기관의 전략적 입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대미협상 가능성과 적절한 전략무기 개발 행보라는 긴장성 사이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군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 군 내 당위원회 활동이 중요 의제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전반적 공화국무장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 대책들과 조직정치적 대책들”이다. 토의 순서로 봐서 무력 전반의 내부 문제(편향들)를 총화하고 개선하는 문제, 기구 및 편제 개편이 일차적으로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0차례의 당 중앙군사위 회의의 추이를 보면, 2018년 이후 토의 내용을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서부전선 목함지뢰사건과 나선시 홍수피해를 다룬 2015년 8월 28일 확대회의를 제외하면, 2019년 12월 22일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와 2020년 5월 24일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는 참가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호위사령부 등의 호명이다. 또한 2019년까지 80명 선의 참가규모를 유지했는데, 이번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112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확대 회의 보도 일자	2013. 8. 25 2014. 3. 17 2014. 4. 27 2015. 2. 23	2015. 8. 28	2018. 5. 18	2019. 12. 22	2020. 5. 24
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중·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군중·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기관 •당중앙위, 내각, 대외부문 책임 일군들 •도당책임비서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군중·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 •무력기관 책임 일군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군중·군단 지휘성원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호위사령부 •각급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당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군중·군단급 단위 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호위사령부 •각급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 •당중앙위 주요 부서 부부장
참석 규모	80명 내외	200여명	80명	80명	112명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에 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이 다시 호명됐고 군중·군단급 정치위원이 포함된 점이다. 비상확대회의가 아님에도 내각총리도 참석했다. ‘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는 곧 ‘총정치국’을 일컫는다. 당 규약상 총정치국은 조선인민군당위원회 집행부서로서 군내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핵심이다. 또 ‘정치위원’은 각 군중·군단급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정치사업을 책임지며 부대 사업이 당 노선·정책에 맞게 진행되는지 장악·지도한다. 이번 확대회의에서 군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 군 내 당위원회 활동이 중요한 의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당 중앙위원회 주요부서 부부장들의 참석은 군에 대한 당적 통제와 관련된 당 군사부, 조직지도부, 민방위부, 군수공업부 등일 가능성이 높다. 당 군사부는 군사 분야에 대한 당사업 감사·통제를 맡고 있으며, 당 민방위부는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교도대 등 준군사부대의 감독·훈련을 담당한다. 당 조직지도부는 군에 대한 당 생활지도 명분으로 담당부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군에 대한 당적 통제와 관련된 문제점, 또는 군사정치활동에 대한 지적이 주 의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인민군대 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 령도를 철저히 실현”할 것을 강조한 부분, 명령서 중 하나가 “중요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 개편안”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대미협상파의 잠정적 후퇴, 전략무기 개발과 약진 속 군부 기강 잡기

지난 2월 29일 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리만건을 비당적 행위와 특세, 특권, 관료주의, 부정 부패 혐의로 당 조직지도부장에서 해임한 바 있다. 그런데 2019년 12월 20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때도 ‘전반적 무장력에 대한 당의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고 담보하기 위한 조직기구 적인 대책들’,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시정하기 위한 문제, 군사정치활동에서 나타난 일련의 결함, 당의 군사노선과 방침의 철저한 관철, 새로운 부대들의 조직·확대개편, 일부 부대들의 소속변경, 부대 배치 변경 등의 군사적 문제와 대책’이 토의됐다. 심지어 “최고영도자 동지는 최근 인민군대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결함들과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들”까지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이번 확대회의의 의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일련의 문제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리만건이 당 정치국 위원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 직접적 연루보다는 당 조직 관리에 대한 책임 차원으로 보인다. 리만건은 당 군수공업부장 출신으로 리병철, 홍영철, 홍승무 등과 더불어 김정은 시대 전략무기 개발의 주역이다. 그런 측면에서 리병철 현 당 군수공업부장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발탁한 것 역시 큰 상징성을 갖는다.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제에 처음 임명된 사람은 김정은과 당시 총참모장이었던 리영호였다. 당시 후계자였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특별히 신설되었던 직제였으나 공식으로 있었던 자리였다. 여기에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지속적인 전략무기 개발’이라는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 기초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략무기 중심의 군사전략 및 작전 변경, 조직 편성과도 연동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박정천 총참모장의 차수 승진 역시 재래식 무기 열세를 보강하는 포병화력 중심의 무기개발 및 전력 개편과 관련된 조치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새로운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는 이미 2019년 말 제7기 제3차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기구·편제 결함 시정, 군사정치활동 결합, 당의 군사노선·방침 철저히 관철, 새로운 부대들의 조직 확대·개편, 부대 소속·배치 변경’ 등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명령서 중 하나인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는 군사지휘체계 개편’은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을 비롯하여 보안사령부, 호위사령부 등 소위 ‘안전’ 및 ‘보안’ 관련 기관의 지휘체계 조정, 기능 강화 조치를 의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략무기 개발과’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69명의 승진 인사를 통해 군의 사기는 높여주면서 한편으로 조직정비와 군사정치활동 결합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기강은 다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향후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미 ‘관망’의 시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북미협상 재개의 여지를 둔 ‘관망’ 속에서 대미협상과의 잠정적 일선 후퇴, 전략무기 개발과의 입지 강화, 군부의 기강 다잡기라고 할 수 있다.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 기초의 재환기와 ‘전략무기’ 등장의 타이밍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주로 선행한 당대회나 당 전원회의 결정에 입각하여 군에 대한 당의 영도와 조직정치적 대책이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당 전원회의를 뛰어 넘는 새로운 군사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올해 견지할 총적인 노선은 이미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

역시 그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는 부분은 5개월 전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의 지속 개발’ 결정의 ‘재환기’로 볼 수 있다.

다만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환기했다는 것은 향후 적절한 타이밍에 북한식 ‘전략무기’를 현시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타이밍’과 ‘효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고 북한 또한 방역 측면에서나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대선 결과 역시 불확실하다. 코로나19로 미국의 대중국 공세가 거칠어지면서 미중 갈등구도도 첨예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북한 문제가 불거지면 미국의 대북 접근이 강경하게 선회할 가능성이 있고 대중국 공세 역시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미중 갈등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 북한 불신은 더더욱 나빠질 수 있다. 빠른 시간 내 북중 무역을 정상화하길 바라는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또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전략무기를 등장시키며 위협 수준을 높일 때, 한중 정상 간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은 협소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의 수위 높은 도발성 전략무기 등장은 타이밍과 효과 측면에서 북한에게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외무성에 신설된 ‘대미협상국’을 공개했다. 북미협상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사안으로 접근할 뜻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지 불확실한 가운데, 북한은 최소한 대미 협상 재개의 가능성을 남겨두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전략무기 등장 카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유력한 가능성은 (탄도 및 순항) 단거리급 무기의 추가 개발 공개, 대공미사일 체계 공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 과정 공개 등이다.

대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전략적 유보 및 관망의 시간

이번 회의는 2019년 이후 포착되는 전체적 기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4.12), 북미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10.5), 연말 북한의 담화 공세, 국방과학연구소 서해위성발사장 중대실험(12.13), 제7기 제3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12.22),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12.28~31),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2.29) 등에서 나타난 기류 변화다. 우선 대미 협상과의 후퇴, 전략무기 개발과의

약진이다. 대미 접근 원칙도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이전 비핵화 대화 불가’, ‘(핵)전쟁억제력 차원의 전략무기 개발 지속’ 등 한층 문턱을 높였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외무성 ‘대미협상국’의 신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직 해임,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지적한 군사정치활동 편향, 불합리한 기구 바로 잡기, ‘핵전쟁억제력’ 강화 등을 함께 교차하며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미협상과 비핵화를 두고 주요 권력기관 및 권력엘리트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 이후 국방기술현대화 차원에서 사거리를 늘리며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던 단계에서 낙후한 재래식 무기, 전략적 취약점을 보강하는 신종 단거리급 무기, SLBM의 개발 단계를 지속하면서 대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는 전략적 유보 및 관망 기간을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KINU 202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